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

국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또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이 상향조정 되고 턴키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가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5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도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춰 함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 위험방지를 위해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PQ실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동가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또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상향 조정,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올러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제재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턴키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현행 발주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건교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특히 입찰 및 계약절차 위반 등 그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제한기간이 1~2년으로 돼 있으나 이를 앞으로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개월, 1,000만원 미만은 3개월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밖에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를 실질화 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입찰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입찰 때 절감(또는 초과) 입찰 사유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및 PQ 대상 공사금액 상향 조정, 연대보증인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임대주택 11만가 구 건설

정부, 서민주거복지 증진 위해

서민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1만가구가 공급되고 국민 임대주택 11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전국 451곳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돼 주거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13만가구 개량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한해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서민과 더욱 밀착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확대됐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질적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다가구 매입임대 4,500가구는 특수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임대도 4,500가구를 공급하고 교통사고 유자녀 등 소년소녀가장 가정에는 1,000가구를 별도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건설하고 국민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IT장비 설치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공동시설을 확충,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수, 총 2조원을 투입해 451곳에 이르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13만가구를 개량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올해는 265개 구역에 대한 용지보상 및 일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1~2곳 등 전국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개발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 사업시행 중 지역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즉시 보고해야

노동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협의체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주는 지체없이(종전 24시간 이내) 재해 발생사실을 전화와 팩

스 등 전송수단에 상관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중대재해 보고시한을 줄여 신속하게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발생 현장의 미흡한 안전·보건시설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8시간 이내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 조항을 없애고 노사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원·하도급 사업주조만 구성토록 한 협의체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고용 중인 근로자 대표와 안전관리자 및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시키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3개월마다 1회 운영토록 규정한 협의체 운영 규정도 매달 1회로 개정된다.

이밖에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이 종전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되며 현행 공경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10종의 제조·사용 규정수량도 크게 강화된다.

또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주석화합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공정위, 누진벌점제 도입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한 누진벌점제가 도입되는 등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기업협력담당관은 지난 5월 4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미래 건설포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누적벌점제 개선 및 누진벌점제 도입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우선 위법 유형 중 위반 정도가 심함 유형의 벌점만을 부과하던 누적벌점 방식을 각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과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 위반으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현재는 대표적인 조치유형의 벌점으로 2점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 유형별로 2점씩 총 4점을 부과한다는 설명했다.

정 단장은 또 같은 유형의 범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누진벌점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누진벌점제는 최근 3년간 동일 유형의 위법행위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2차례 이상 받은 사업주에게는 차후 시정조치 때 50%의 가중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차후 하도급 대금 관련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행위유형 별점 2점에 가중벌점 1점 등 모두 3점의 벌점을 받는다.

정 단장은 이와 함께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5만개 업체에서 올해는 제조·건설업종 6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와 특약조항을 사용하는 건설업종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현재 건설업종 5,000개 업체를 포함한 2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과 협력업체 선정·운영,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는 벌점과 과징금 감면 등 공정위 차원의 혜택 외에도 계약·입찰 때 가산점과 금융·세제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협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공사 쏟아진다

주공, 6월까지 17곳서 2만가구

주공사는 다음달 중 인천 향촌 등 8곳에 1만2,000가구분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또 5월 말까지 하남 풍산 등 9개 지구에 1만1,000가구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발주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가 내놓은 '5·6월 중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인천 향남 등 모두 17곳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구별로 분할,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들 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2만3,642가구에 이른다.

주공은 5월 중 하남 풍산 2,117가구를 비롯해 모두 9곳에 지을 1만1,455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주공은 하남 풍산 3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와 김포 서암 1개 공구 등 3개 공구를 1등급을 대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어 광명 소하와 완주 봉동2지구, 거제 장평 등 3곳의 아파트 건설공사도 발주 준비에 들어갔다.

6월에는 인천 향촌 2,852가구를 비롯해 모두 9곳에 아파트 건설공사(1만2,187가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지구별 가구수는 인천 향촌지구가 가장 많고 이어 △광명 소하 2,635가구 △화성 태안3지구 1,658가구 △부산 정관지구 1,533가구 △목포 옥암2지구 1,294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공사 6월 시설공사 발주계획

구분	지구명	유형	가구수
건축·기계·토목	연천전곡	국민입대	742
	광명소하A1,3BL	"	1,491
	화성태안3	"	1,658
	광명소하	공공분양	1,144
	부산정관	국민입대	1,533
	인천향촌	공공입대	651
	"	공공분양	2,201
	춘천거두	국민입대	375
	원주무실3	"	1,098
	목포옥암2	"	1,294

표준품셈 상시관리체계 구축

건교부, 공사비 합리적 산정 위해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대한 상시관리체계가 갖춰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기계의 작업시간과 재료 등을 종합해 만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품셈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건교부는 2,460개에 이르는 품셈항목을 중요도와 활용빈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로 심의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품셈을 관리하는 건설기술

연구원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그룹별로 최대 15명의 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1명 이상 참여시켜 품셈의 투명성을 높이고 14

일간의 공고기간을 뒤 충분히 의견을 수렴, 확정하도록 했다.

이는 품셈이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사예정가격의 기계 경비 산출항목에 대해서는 환율·유가·금리 등의 경제지표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상대적으로 시장가격 반영 수준이 미흡한 990개 항목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에는 건설기계의 성능개선에 따른 효율성을 검토, 터널공사 등 452개 항목을 조사·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표준품셈 대신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도급한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실적공사비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는 35%에서 50%로 적용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플랜트 자격증 국내서 댄다

CPE자격 도입, 7월 15일 첫 시험

미국 플랜트엔지니어(Certified Plant Engineer:CPE) 자격 시험을 국내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플랜트학회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최근 "국내에 플랜트 관련 자격시험이 없어 미국 설비공학회(Association for Facilities Engineering:AFE)와 협약을 통해 플랜트엔지니어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플랜트학회는 "국내에 여러 가지 엔지니어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각 자격증의 시험과목이 일부 과목으로 국한돼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플랜트업계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CPE자격 시험은 총 10과목으로 △기계공학 △전기공학 △계장공학 △토목공학 △경제성공학 △프로젝트 관리 △건설안전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공조냉동공학 등 실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플랜트학회에 따르면 연 2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제1회 시험은 오는 7월 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업체들은 해외플랜트 수준급 증으로 인해 현장에 필요한 플랜트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플랜트 전문인력을 1명 양성하는데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앞으로 업체간 스카우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